

# 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 정세 진단 토론회

주최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정책연구원  
4.27 시대연구원, 소통과혁신연구소

후원 : 인터넷언론 '민플러스', 평화시대

일시 : 2020.11.16(월) 14:0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순서

◆ 사회 : 박용석(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

◆ 발제

-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3
- 정육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11
- 손정목(4.27시대연구원 부원장) ..... 22

◆ 토론

- 김장호(민플러스 편집국장) ..... 30
-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 34



[발제문]

##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정세 전망

김 동 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북미대화 재개 및 북미관계 진전 간 연관성 빈곤

○ 미 대선 결과 바이든 당선만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임.

-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해당 선거 기간 중 기본 판세와 대선 캠페인 효과에 의해 결정되며 미 대선 이후 시급성이나 중요성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음.

-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와 비교해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코로나 문제나 내부 정치적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바이든 실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상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중 정책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와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미중 전략적 경쟁의 지속 하에서 북미관계 진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미 대선 결과의 후유증과 유권자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책을 우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

**항입.**

- 미래는 포스트코로나 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불리는 예측 불가한 환경이 상수가 된 시대로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선거 이후 내부적인 분열 및 혼란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집중하면서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나가려고 할 것임.
- 오히려 미 대선 이후 후속 처리의 유동성,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북한의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개최 이후 김정은 정권의 2기 시작 그리고 한국의 대선 국면 진입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겹치면서 북미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남북미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문제를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아 상호 의도에 대해 불신과 진정성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북한	제8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	건국 75주년		당창건 80주년
미국	바이든 정부 → (2021-2024)	중간 선거		미 대선	차기정부 → (2025-2028)
한국	보궐 선거	대선	차기정부 → (2022-2027)	정전 70주년	광복 80주년
기타	도쿄 올림픽	항저우 아시아안 경기 (9월)	중국 20차 당대회	파리 올림픽	

##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지와 북한의 반응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양자적 접근보다 우선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적으로 북한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미중관계와 연결하여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음.

- 바이든에게 북핵문제와 관련해 2가지 선택지가 있음. 하나는 정상회담과 같은 이벤트성 단기적 성과를 통해 노벨평화상에 도전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실무협상을 우선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상향식(bottom-up) 단계적 접근으로 미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김정은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처럼 후자일 가능성이 높음.
- 그렇다고 초기부터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 하에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의 반응과 우리 정부의 메시지도 면밀하게 고려해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것임.
- 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거나,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강화 및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 외교적 노력에 우선 집중해 나갈 것임.
- 무엇보다 대중국 견제 차원의 장기 동북아전략 속에서 우선 동맹국들과 함께 북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나간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시급한 현안 문제에 집중하며 속도를 조절해나갈 것으로 보여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진전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음.
- 실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수잔 라이스 등 매파 외교 인사들로 인해 대북강경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인권문제도 중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보다 민주당의 가치외교나 주변 인물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불확실성 측면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원했을 수도 있지만 북미대결의 장기전을 선언한 만큼 바이든이 되었다고 쉽게 북미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임.

- 북한은 북미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하노이 이후 시간을 낭비했다고 보고 있어 미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교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북미관계에 기대를 갖지는 않을 것임. 오히려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발표할 새로운 5개년 계획 및 국가전략은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제재를 상수로 놓고 수립할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이번 미 대선 이후 혼란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권위가 해체되었다고 보고 있을 것임. 이는 바이든이라고 할지라도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안보적 우려 해소를 보장할 수 있는 합의 이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하에 북한은 북미대화에 쉽게 응할지 않을 것임.

-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 발표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미국이 적대정책 철회 및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신뢰할 만한 상호단계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북미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 충족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조건 충족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 양측 모두의 변화와 조건 충족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트럼프 시기와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 짐.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와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 북한의 군사적 행동으로 과거 오바마 시기 2009년 테자뷔와 ‘전략적 인내’의 재현 가능성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미 차기 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같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게 실제 될 차관보급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인 2021년 전반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공백기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북한도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가짐.

- 2021년 전반기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세팅되기 전으로 관련 직위의 인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2009년 오바마 정부 취임 직후 대포동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을 한 것처럼 상대가 준비가 되기 전 몸값을 극대화하고 협상에 필요한 카드를 최대화 할 수 있음.
  - 반면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대화의 기대가 높았지만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해 결국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향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던 전략적 인내가 반복되는 것을 우려해 군사적 행동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이라던 전망도 가능함.
  - 그러나 북한은 예측 불가능했지만 오히려 협상의 가능성이 높았던 트럼프 시기에 하노이 노딜을 경험하면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과 제재해제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오히려 북미대화나 양보를 위한 압박이나 협상카드 차원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된 안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억지력을 보여주면서 내부결속을 위해 핵무력의 강화와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해 나가려고 할 것임.
  - 2021년 전반기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이유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쌍중단(핵실험/ICBM 발사 중단과 연합훈련의 중단)을 우리 측이 먼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열병식에 공개한 북극성-4형의 실제 잠수함 발사나 신형 ICBM 지상 연소실험과 제한된 사거리 발사 등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와 선택적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위한 시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
- 지금은 2009년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외교력과 당시 한국 정부의 성향에도 차이가 있고 북한 역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으로 2009년 상황이 반복되거나 ‘전략적 인내 2.0’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
- 북한의 군사행동 수위에 따라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시나리오별 사전 논의 및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함.

- 2021년 전반기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확실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바이든 차기 정부의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 방안

- o 북미관계에 끌려가지 않는 남북관계와 보편적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한미 진보정당의 만남만으로 한미공조가 원만할 것이라는 희망과 단정은 금물이며 그럴수록 초기에 자기주도 원칙에 따라 우리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해야 함.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한미동맹 강화로 인해 오히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입지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북한에게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 남북관계로 인한 한미관계의 불편함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관리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함.
- 2018년의 재현: 도쿄올림픽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내년 전반기 상황 관리가 중요
- 도쿄올림픽을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남북/북미 관계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함께 미국 역시 새로운 정부 시작 이후 대선 도쿄올림픽 개최까지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적절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도쿄올림픽을 활용하는 카드는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 2차 웨이브 속 도쿄올림픽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고 북한 입장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경로를 답습하는 수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핵화 협상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수 있음.

- 도쿄올림픽을 무대로 북미 정상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현재까지 선제적으로 취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정치적 선언 수준의 종전선언 카드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북미대화를 재점화하기 위해서는 3월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동계훈련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미 대선 이후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북미관계 진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와 연계해서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바이든 당선자의 선택에 따라서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유인책을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이후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북미관계를 예측하고 당분간 북미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4. 미중 전략적 경쟁하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정책과 한미동맹

○ 바이든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대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도 완화될 전망

- 바이든의 당선은 전 정부 정책의 단절이라는 차원에서 한미관계 측면에서 보면 기존 트럼프 정부 시기 방위비분담금이나 저작권 전환 협상 등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들

백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음

- 바이든 역시 경제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보호주의 경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보를 얻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임.
- 방위비 분담금 경우 트럼프가 거부한 우리의 제시안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 훈련과 연관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사드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방위비분담금,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 훈련 문제와 연결되어 미 전략정보자산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이 새로운 뇌관으로 대두될 수 있음.

○ 한국은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을 압도하는 불균형 상태로서 당면한 최대의 외교적 도전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해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음

- 한미동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국을 겨냥한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려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동맹 중심의 접근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동맹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 동맹과 균형의 미래는 향후 미중관계에 의해 선택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운명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의 최적 선택은 동맹이 북한과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동북아에서 미중이 균형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평화공공재 생산
- 군사영역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한미동맹의 총체화, 신성화, 물신화가 유지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커다란 장애로 작동할 수 있어 이러한 장애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의미와 목적,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규정과 재조정이 필요함

<끝>

[발제문]

## 바이든 시대의 미국과 한반도 정세

정 육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1. 바이든 시대의 화두: 안보의 경제성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미국 안보전략의 화두는 무엇이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하든, ‘안보의 경제성’을 피할 수는 없다. 과거에 미국 경제가 잘 나갈 때에 미국인들은 미국이 세계 경찰이든 깡패든 나라 밖 일에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크지 않았었다. 하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장기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미국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뚜렷이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국이 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생계와 안전을 확보하는 일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1920년말-1930년대초 대공황 시기 때보다 악화될 공산이 크다. 대공황 당시에는 공공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일으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봉쇄(Great Lockdown)’ 시대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게 될 수 있다. 이는 거꾸로 실업수당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정부의 직접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 때 첫발을 내딛었다가 트럼프에 의해 엎어진 보편적 의료보

협 제도의 도입도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의 경제성’ 이 향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많은 미국인들이 질병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나라 밖 일에 대한 개입을 유지하거나 높이면 그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무사할 수 있겠는가? 8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폭증하는 보건의료와 민생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미국의 절박하고도 구조적인 문제는 군사력을 앞세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를 추구해온 미국의 관성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목표는 정권 재창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원하든 그렇지 않든 아이젠하워가 던진 화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안보의 경제성’ 은 바이든 시대의 한미관계 및 한국의 선택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함의를 지닐 수밖에 없다. 미국이 ‘안보의 경제성’ 을 추구하는 방식은 비용이나 역할, 혹은 둘 모두를 동맹국이 더 많이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돈을 우선시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역할을 중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간의 역사 갈등 해결을 압박하면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약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드 배치를 요구·관철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이었다. 한미일이 MD 자산을 통합하면 경제적인 방식으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뿌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그 최대 구실을 북한에서 찾았고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염두에 뒀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와 “아시아 재균형” 을 동시에 공식화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의 전략을 계승·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해졌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도 더욱 첨예해지는 반면에, 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한국이 미중관계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략할 위험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다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미가 같이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를 추구해 안보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군사비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수단’이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낯선 얘기가 아니다. 미소 냉전 종식 직후 샘 너과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한 것이자 민주당 출신의 현인으로 불려온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호소이기 때문이다.

## 2. ‘전략적 인내’로 갈까?

바이든 시대의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내의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대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팀을 구성하는 데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를 들어보자. 2009년 1월 20일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출범 직후엔 대화파인 스티븐 보즈워스를 대북정책 특별정책으로 임명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2월 하순 동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그리고 보즈워스를 대북 특사로 파견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대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공백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하나의 가능성’이지 ‘정해진 미래’는 아니다.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이 직책은 상원의 인준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해 한미간의 정책 협의에 나서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문재인 정부 안팎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북한

이 핵보유국이 아니었던 반면에 현재는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주된 근거이다. 또한 미국 조야에서도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를 답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바이든이 대선 후보 때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 전략적 인내와 흡사하다. 그의 대북정책 방향은 2020년 3월 <뉴욕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계속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처럼 보여주기식 헛된 만남이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김정은을 만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월 22일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김정은이 북한의 핵 능력을 감축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정상회담은 임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만들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에, ‘클린턴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처럼,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동결할 경우 상응조치로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재 완화에 앞서 북한이 중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2020년 7월 미국 외교협회(CFR)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세 차례의 TV용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낸 것이 없다”며, “하나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도 폐기된 것이 없고 단 한명의 사찰관도 현장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기에 “북한의 능력은 더욱 강해”졌고, “트럼프 덕분에 잔인한 독재자인 김정은은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 부랑아가 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다.<sup>1)</sup> 바이든은 마지막 TV 대선 토론에서도 김정은을 “폭력배(thug)”라고 불렀다.

---

1) <https://www.cfr.org/article/joe-biden>

이러한 답변 내용은 전략적 인내와 친화성을 갖는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유지·강화하면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고 믿거나 믿는 척 하면서 북핵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말았다. 그 결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해졌다. 바이든이 지금까지 밝혀온 대북정책의 방향은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은 김정은을 “잔인한 독재자”, “고립된 부랑아”, “폭력배” 등으로 불러왔는데, 이러한 북한에 대한 ‘악마화’ 화법은 전략적 인내의 토대 가운데 하나였다.

바이든과 그의 참모진이 동아시아에서 현상 유지를 선호해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가 부통령으로 있었고 참모진이 고위 외교안보 관리를 맡고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 과 ‘전략적 인내’ 로 압축된다. 그런데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었다. 시기적으로도 두 정책은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북한 위협을 구실로 삼아 한미·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포위하는 데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바이든 캠프가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는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우선시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바이든 집권시 미국은 적극적인 대북 협상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동맹 강화 및 한미일 군사협력 복원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욱 높아졌기에 이러한 전망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기회로 인식한 기류도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잘 보여준 장면이 2009년 7월 한미일 국방 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이 되려고” 한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다” 고 강조했다. 그가 협력 강화란 MD를 기반으로 삼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은 “3자 MD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good chance)” 라고까지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국무장관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3년 6월 4일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비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비롯한 요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주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북미간에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8월 10일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금지선을 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수천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을 감내했던 것” 과 마찬가지로 이보다 핵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북한의 핵보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스가 이런 주장을 한 데에는 북핵 감내가 전쟁보다는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었다. 동시에 북핵 대처 방안으로 대북 억제력 강화, 미국의 호전적인 언사 자제, 동맹국들과 MD 능력 및 대북 제재 강화, 중국과의 협의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전략적 인내 시기의 대북정책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바이든의 집권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변수이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바이든의 대북정책도 유동적일 수 있다. 한국 및 북한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전략적 인내’ 도 오바마 행정부의 자체적인 판단 못지않게 북한의 도발적 언행 및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퇴행적인 선택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많은 이들의 전망처럼 내년 여름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공백 상태로 이어지면, 그 다음엔 한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나쁜 시나리오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최선의 전망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년 2-3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선제적으로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 3. 북한의 선택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문제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략적 도발을 일삼았다.”

국내외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 행정부는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를 거쳐 바이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위에서 인용한 공식(?)은 얼마나 진실에 부합할까?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 2달도 안된 때였다. 그리고 이 선언은 미국의 신임 행정부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 하지만 북한이 다짜고짜 이런 선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NPT 탈퇴 발표에는 노태우 대통령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1992년 1월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팀 스피릿’ 한미연합훈련을 한미 국방장관들이 뒤집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선 조지 W. 부시가 앨 고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도발을 한 쪽은 북한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였다. 부시 행정부는 취임 직후 북미 협상을 중단하고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선언했다. 또한 북한을 핵 선제 공격 대상에 올려놓았고 2002년에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어땠을까?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소형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위성의 탈을 쓴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유엔 안보리로 가져갔다. 또한 대북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뒤로 미루고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분명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북미간

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2-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군사 훈련을 강행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한미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를 ‘북한급변사태’ 범주에 포함시키고선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무력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연합훈련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북한의 지도자가 뇌관런 질환으로 쓰러져 와병 상태에 있는데, 한미가 김정일이 사망하면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발언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면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북한은 이 시기에 핵무장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불과 50일 만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종언”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이 사례를 소개한 이유는 2021년 상반기에 2009년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던 트럼프를 비난했었다. 또한 10월 1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 하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3월에 한미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변수이지만 말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무너진 남북관계 회복의 풍향계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 한미군사훈련이 실시되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2009년과 흡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ICBM 시험발사부터 단거리 발사세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사적 대응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식 전략적 인내’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는 미국만의 선택지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미국 대통령을 만났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약속한 것들 가운데 지키진 것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자력갱생”으로 인내하면서 한미의 태도 변화를 압박

하고 기다리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북한의 눈에는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아니라 강화로 비취지게 된다. 미국이 대화하자고 해도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안팎에 팽배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강력히 원한다”는 인식이 ‘흘러간 옛 노래’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여 문재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자명하다. 한미훈련 취소나 연기를 발표해 2009년의 되풀이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의 당대회에 앞서 이러한 발표를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명분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자가 국정 과제 1호로 선정한 코로나19 대처에 집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자고 설득할 수 있다. 또한 연합훈련 중단은 바이든의 다짐인 기후 변화 위기 대처에도 도움이 된다. 훈련에 동원되는 장비와 무기가 내뿜는 탄소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군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세계 47위 수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여름엔 코로나19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의 스가 정권도 내심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대규모의 군사훈련 실시를 중단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술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혜방꾼’ 일본을 ‘협력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면 대북 군사 태세와 전시작전권 환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요란하게 대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작게 하면 된다. 또한 전작권 전환의 최적의 조건과 환경은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대규모 군비증강에 있지 않다는 것도 자명해졌다. 북한의 반발을 야기해 전작권 환수의 조건과 환경이 멀어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매진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최적의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군비증강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비핵화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비핵화는 북미관계가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군사력 균형 차원에서 그렇다. 그런데 적어도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비핵화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7년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 12위로, 북한은 18위로 평가되었었다. 2021년에는 남한 6위, 북한 25위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년간 국방비로 300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을 볼 때, 격차는 더욱 벌어질 공산이 크다.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가 벌어질수록 북한은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데에 더욱 주저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에 더욱 집착할 공산이 크다. 역대급 군비증강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 자주국방의 길도 더욱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때이다.

#### 4.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하는 이유

비핵화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둘러싼 동상이몽은 커져만 갔다. 북한은 “미국 핵위협의 근원적인 해소”도 “조선반도 비핵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자신의 핵정책이 비핵화에 포함되는 것을 꺼려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FFVD)’를 제시했다. FFVD에는 폐기 대상에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및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중용도 프로그램도 포함되었고 강력한 사찰 요구도 담겼다. 북한 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미 양측이 말하는 비핵화는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창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북미대화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이 대신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기승전 ‘비핵화’의 현실에서 혁신적인 비핵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표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기) 남북경협이 재개가 필요하고(승) 이를 위해서는 제재가 완화·해제가 요구되는데(전)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미는 비핵화의 목표는 물론이고 그 정의 자체에도 합의하지 못해왔다. 그렇다고 비핵화를 우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 역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도 없다.

그런데 시야를 세계로 넓혀보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비핵무기시대(비핵지대)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이 비핵지대이고 여기에 속한 나라들이 116개국에 달한다. 비핵지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담겨 있고 그 정의와 목표를 담은 유엔 문서도 존재하며 유엔 안보리도 지지·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유엔 군축위원회는 1999년 비핵지대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는데, 미국도 유엔 군축위원회 회원국으로 이에 동의했고 유엔 총회도 이를 승인했다. 또한 2009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87호에서도 비핵지대를 지지·환영·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를 두고 헤맬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비핵지대를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남북한이 “비핵지대 내” 당사자들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5대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비핵지대 외” 당사자들로 이 조약의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참여하는 구도를 일컫는다. 기본적인 내용은 남북한은 비핵화를 확고히 이행하고, 핵보유국들은 남북한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끝>

[발제문]

## 미 대선결과와 한반도 정세 전망

손 정 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 1. 2020 미 대선 의 성격

미 대선 이 분열 과 갈등 끝에 바이든 의 승리로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의 전면적 선거결과 부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선전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 연방총무처는 바이든을 아직 공식적으로 당선인으로 확정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북을 비롯 터키, 브라질, 멕시코 등도 그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바이든은 아직 법적 당선인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전은 후반전에 들어섰다.

지난 4년 내내 미 지배세력 간의 격렬한 대립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힘의 한계에 이른 상황을 반영한다. 지난 30여년간 미국은 일극패권국으로서 끝없는 전쟁전략에 의거한 과도한 힘의 낭비와 무리한 제재압박정책으로 세계 각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 결과 미국 압박에 대응하여 핵무력을 완성한 북중러는 전략적 단결을 강화하여 거꾸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반면 미국은 자체의 군사력이 한계에 이르러 세계 곳곳에서 미군철수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패권은 사실상 끝나고 있다.

경제부문 역시 미국은 27조달러에 이르는 과도한 채무와 무분별한 양적완화로 75년간 이어져온 달러기축체제는 한계에 이르렀고, 코로나19로 실물경제상황 역시 극도로 악화되었다. 반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 유일의 경제성장국으로서 구매력 기준 세계1위인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세계경제패권이 몰락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영국의

EU이탈을 비롯한 EU의 분열과 한일 갈등 등 미 동맹의 분열 등은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미국의 지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군사패권, 경제패권 모두 몰락해 가는 상황에서 기존 미국중심 세계질서의 변화는 불가피 하다. 이미 지난 해 시진핑주석은 ‘현재 세계는 100년만의 대변혁기’ 라 아였고, 마크롱대통령 역시 ‘서방 300년 지배체제 이제 전복과 변혁에 의해 종결에 가까워진 상황’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의 등장은 이러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한 지배 세력 내부(일부)의 현실주의적 판단의 결과다. (트럼프는 결코 돌출적, 막가파적 별종으로 일시적 대중지지로 출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층으로 대표되는 군산언복합체 세력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패권을 유지하면서 어떻 하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였다. 이들은 부패하고 치매증상이 있는 바이든을 앞세워 트럼프에 의해 훼손된 자신들 중심의 지배질서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 이해의 차이가 트럼프 탄핵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낙마시도로 이어졌고, 이번 대선에서는 사활적 대결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군산언복합체 입장에서 이번에도 진다면 거의 완전한 몰락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상대 후보가 선거결과를 전면 부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선거부정의혹이 제기되어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과거 많은 예속국가들과 신흥국에 친미정권 수립을 위해 써먹던 선거전술을 자국 대선에 전면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미국판 색깔혁명).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상원의원 사니는 “아프리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곤 했다. 아메리카는 이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 고 일갈했고, 짐바브웨 집권당 대변인은 “우리는 이전 노예 주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울 게 없다” 고 조소했다.

이렇듯 기존 미 주류세력은 과거 천문학적 돈 선거로 치러지는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내던지고 심대한 부정의혹을 동반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기득권 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번 미 대선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조종(弔鍾)이라 할 것이다.

## 2.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진보적 관점

지난 4년간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보수권, 소위 개혁적 언론이건)은 친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를 비판하였다. 그를 인종주의, 파시즘, 극우 등으로 공격하고, 대선에서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모두 친바이든 입장에서 미 주류언론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반면 트럼프의 부정선거 의혹제기에는 증거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 몽니정도로 치부하고, 소수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된 갖가지 부정선거 사례를 의혹 수준에서 거짓말 정도로 치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 주류언론들이 거의 모두 바이든 압승, 트럼프 대패 등의 여론조사 보도는 드러난 결과만 보더라도 오보임이 드러났다. 이들은 2016년에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였고, 이제 대선 최대의 패배자는 미 주류언론들이라는 조소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10일 현재 7천100만표(47.7%)이상 득표로 2016년 보다 약 790만표 더 득표하였다. 이는 트럼프가 코로나19와 경제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반에 가까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하원 선거에서도 주류언론의 민주당 승리 예상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상원 공화 다수, 하원 공화 의석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언론 보도와 달리 미국 민심은 트럼프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반영한 공화당 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진보진영은 이러한 상황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선거가 애초부터 돈 선거로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를 문제 삼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바이든 당선을 수용하는 태도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에게도 바이든 인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모두가 무비판적으로 ‘예’ 라고 할 때 최소한 반민주적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오’ 라고 하는 태도는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 3. 제국은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다.

현재 미 대선은 1차 12월 8일 선거인단 구성, 늦으면 내년 1월6일 상하양원합동회의에 가서야 최종 결과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 측은 대선승리 선포하고 내각을 구성하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언론지형을 활용하여 트럼프 진영의 분열과 회유, 압박을 통해 굴복을 유도하고 있다. 승리 굳히기다. 반면 트럼프측은 선거 불복을 선언하고, “strongest 증거 있다” 고 강조하며 합법적 방식으로 재검표 및 부정선거 소송 제기하여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부정선거 대표적 사례는 사망자 투표, 바이든 몰표 같은 사례로 전 연방 선관위원회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개표로, 이러한 선거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부정 의혹은 연방대법원이 심리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이 외에도 선거부정 양상은 우편투표 대리투표, 우편투표 부정용지, 이중투표, 날자와 시각 조작, 참관인 배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위한 3개의 전술은 다음과 같다.

- ①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연방대법원 제소 및 재검표 요구. 재검표가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12.8 선거인단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는 선거인단 과반 득표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조성.
- ② 만약 재검표나 법원 판결로 선거부정이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57석) 등 공화당이 주지사과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선거결과 무효 선언하고 선거인단 구성 제출 가능성. 12.14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 미달 가능성 (수정헌법 12조)
- ③ 1.6 상하양원 1개주 1표로 하원 대통령, 상원 부통령 선출.

트럼프는 이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 장관에 의한 부정투표 수사 지시와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다분히 격화될 시위 폭동에 대처를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 대테러센터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밀러의 국방장관 권한 대행 임명 등은 이 사태 대처를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패배를 받아들이는 후보의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 측근들도 가세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직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 이라고 밝히고 외국정상들에게 ‘실수 말라. 미 대통령은 하나뿐’ 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 이라고 자신했다. 펜스부통령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불복의지를 밝혔다. 모두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다.

이 같은 대응을 볼 때 트럼프측의 선거부정 문제제기가 일각의 주장처럼 단순히 몽니나 안전한 퇴임을 위한 명분쌓기 차원은 아니라고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측은 선거 전부터 우편투표 부정 가능성을 계속 지적해 왔듯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 이러한 흐름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미국의 주류언론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이든 승리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주장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양 진영이 명운을 걸고 다투는 형국이다. 과거와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제 공은 법원과 의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11-12월 미국은 재검표와 법원 심리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충돌 등 혼란과 분열 격화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뒤집기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군산언복합체의 영향력이 여전히 사회 전 영역에서 강력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거의 절반이 기존 주류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감을 갖고 있어 분열과 혼란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의 뒤집기가 성공한다 한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세력들의 반발로 분열과 혼란은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정치적 지도력은 치명상을 입었다. 제국은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다.

## 4. 한반도 정세 전망

### 1) 초기 적대정책 유지

- 바이든의 집권은 군산언복합체의 세계패권유지를 위한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RT는 8일 전문가 말을 인용 ‘바이든은 백지가 아니며, 미국은 2016년 이전 전쟁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 (Joe Biden is no blank page, may well return to warmongering policies waged by US before 2016, former OSCE vice-president tells RT)고 보도하였다. 북중러의 전략적 단결이 공고한 변화된 현실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정기간 세계 각 곳의 긴장은 올라 갈 수 있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다면 트럼프 정책들은 대폭 수정될 것이다. 이미 ABT (Anything But Trump)라는 바이든 정책표어가 보도되고 있다. 이미 보도되고 있듯이 오바마 시기에 취해졌던 중립 포위정책과 동맹강화정책 등이 재현될 것이다. 미군 철수를 단행했던 시리아와 이라크 등의 조치도 재고될 것이고, 독일주둔 미군 감축조치도 재고될 수 있다. 경제는 더욱 양적완화를 확대하여 부자들을 더 살찌게 하면서 달러체제 지속을 도모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불복 소송으로 초기 내각 인선과 정책 입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12월 중순이나 내년 취임 이후나 돼서야 초기 내각구성 및 정책 입안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 한반도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은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바이든은 이미 여러 차례 대북적대정책 유지를 밝힌바 있다. 그는 선거기간에도 김위원장에 대해 폭력배, 독재자 등 적대감을 드러냈고,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이 “핵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만날 것” 이라고 북의 선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바이든이 ABC를 내세웠던 제2의 부시로서 트럼프 시기 북미간 합의를 상당기간 거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 역시 바이든에 대해 “바이든과 같은 미친개” “몽둥이 때려 잡아야”, “모리간상배”, “사흘 굶은 들개“, “치매 말기“, “집권욕에 환장이 된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지칭하여 그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제기한 바대로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초기 바이든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미 북은 지난 1월 정면돌파전 발표에서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에 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또 지난 7월 크리스마스 선물도 유효함을 밝힌 바 있다.

북이 제시한 ‘대북적대조치 폐기와 조미협상 재개’ 라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대북적대조치 폐기란 단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도가 아니다. 북이 제기하는 대북적대조치 폐기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즉 북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비핵화 협상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북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2010년 1월 외무성 성명에서 비핵화는 평화협정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가능하다’고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했고, 2015년10월 외무성 성명에서도 ‘한반도 평화 보장 방법은 두 가지 뿐’ ‘하나는 핵 무력을 중추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의 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냉전의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는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끝내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무한대한 핵 억제력이 점점 강화돼 가는 것을 보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지난 9월 12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부 장관이 아세안안보포럼에서 ‘미국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로의 길을 지지’ 한다고 밝혔고,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불러올 항구적 합의(조약)를 위한 문을 열었다’ 고 밝힌 점이다. 당시 KBS가 남측 정보당국의 북미간 물밑접촉 파악을 보도(9.23)한 것을 보면 북미간 평화협정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 2) 미국은 합의이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를 오바마 3기가 아닌 클린턴 3기일 가능성을 밝혔다. 당장은 아닐 것이다. 클린턴이 북과 화해정책을 쓴 것은 쓴맛 단맛 다 본 뒤인 집권 말기에 이르러서다. 역대 모든 군산복합체 정권들의 대북 정책은 비슷했다. 바이든이 핵무력을 완성한 북을 상대로 과거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초기에는 대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북은 미국의 새 정권 초기 여러 차례 군사력 과시를 통해 미국을 견인한 바 있다. 오바마 1기 시작 초기인 2009년 4월에 인공위성 광명성2호, 5월에 2차 핵시험을 단행하여 오바마정부를 놀라게 했고, 2기 초기인 2013년 2월에도 3차 핵시험과 3월 전시상황 선포로 미국의 급변사태 전략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때 파탄났다.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도 초기부터 ICBM과 수소탄시험 등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미국을 결국 정상회담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때 북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초기부터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 내에서 지난 10.10 공개된 신형 다탄두 ICBM (MIRV) 시험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의 군사적 능력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시기 합의 사항 이행을 강제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한미동맹 문제를 비롯한 트럼프 시기 추진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과 쿼드 등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정책은 미국의 자체 전략 변화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북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단결 그리고 누적된 재정 적자와 경제력 한계 등에 의한 정책이기 때문에 해외 주둔 미군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미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망가진 상황에서 미국은 결코 과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제 미국은 과거처럼 북과 전쟁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더구나 중국과 대결 상황에서 북과도 대결하는 2개 전선은 유지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과 대결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한반도에서의 북과 화해는 불가피하다. 트럼프 정부 보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문제도 현안으로 제기될 것이다.

<끝>

## 미 대선결과와 한반도

김 장 호

(인터넷 언론 ‘민플러스’ 편집국장)

### 1. 미대선 결과가 말해주는 것

#### ○ 미국내 분열의 격화

미국이 수습할 수 없는 내부 분열과 대결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바탕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가 만들어놓는 백인 중산층의 몰락과 심각한 양극화가 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몰락한 백인중산층의 요구를 우익적 파퓰리즘으로 조직하고, 인종주의적 차별의 심화, 동맹에 대한 수탈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대결구도를 획정해 놓았다.

이러한 구도는 이제 불가역적인 것으로 굳어져 있다. 이것이 미국내 진보세력의 일정한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미국의 위기는 미국 지배계급의 분열에서 올 것이다. 대체로 한 체제의 몰락이라는 것은 지배계급내 갈등과 파국적 정쟁으로부터 온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이러한 미국 기층과 지배계급간의 분열이 코로나19위기와 미국 선거제도의 취약성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미국은 차기 대통령 결정 문제를 놓고 과도적인 이중권력 상태로 들어갔다. 이 2개월간의 대결이 향후 미국내 분열의 판도와 양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이제 미국내 분열과 대결은 더욱 가파른 길목으로 접어들 것이다.

## ○ 중미분리의 강화

미국내 분열은 중미대결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며 그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중미대결은 관세전쟁, 환율전쟁에서 기술패권전쟁, 금융전쟁, 군사적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중미간 협력적 G2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중미 디커플링 시대를 열게되며, 군사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국제질서의 재편을 강요할 것이다.

여기로부터 한편으로는 군사정치적 동맹관계, 경제블럭으로 재편이라는 긴 혼란과 대결, 국제통상의 축소라는 대격동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미국패권유지에 동조하는 세력과 새로운 다극화 질서를 세우려는 세력간의 강도 높은 쟁투가 벌어질 것이다.

## ○ 동맹의 재편

미국내 분열과 중미대결의 심화는 다수 신흥국들에서 심각한 정치군사, 경제적 모순이 격화되는 운명을 안겨줄 것이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통해 전쟁비용과 군사비를 감당하며, 자국시장을 열어 신흥국이 수출경제를 통해 성장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중국중심의 질서체계는 아직 신흥국을 끌어안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동맹관계의 재편과정은 트럼프처럼 힘으로 동맹관계를 재편하든, 바이든처럼 동맹가치를 중시하든 본질에 있어서 대중고립포위전략에 드는 비용과 자원을 전가시키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신흥국들은 양자택일도 원하지 않지만 더더욱 미국패권유지 비용을 분담하면서 양자택일의 길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신흥국이 미국과의 관계서 앞으로 발생할 갈등과 저항요소이다.

## 2.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

### ○ 비핵화협상에서 핵군축 협상으로

한반도에서 직접적 비핵화협상 시대를 끝냈다. 지난 3번의 북미간 정상회담은 한 편으로

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 핵무장의 실제적 합법화를 진척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제 북미협상이 강력한 핵무장 국가가의 핵군축협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후 평화협상은 본질에 있어서 정전체제를 바꾸는 것임과 더불어 핵담판이다. 이 문제를 놓고 북미간 협상에서만 아니라 남측 여론의 향배를 구성하는데서도 정치세력간의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대결과 갈등이 수반될 것이다.

### ○ 대결과 협상을 병행한다.

지난 열병식에서 북은 미본토와 괌, 주일미군, 주한미군과의 대결에서 미국의 전쟁실행력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갱신목표를 달성해 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장기적 대결정책의 반영이다.

다른 한편 김여정 부장이 7월 4일을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대화는 지난 번처럼 전략적 담판보다는 전략적 위기를 관리하면서 남부관계 개선의 모뎀팀 형성, 북미협상 프레임을 핵군축협상, 핵담판으로 전환해가는 의미를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 3. 한미동맹과 남측의 선택

한국은 중미대결과 한미동맹재편과정에서의 비용증가로 심각한 딜레마에 처해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압박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비용전담과 능동적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 경제적으로도 반중경제블럭에 참가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한국은 선택할 수 없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렇게 강력한 양국의 틈마구니에 서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명청 교체기에 삼전도의 비극으로 끝났고 구한말에는 일제식민지로 굴러떨어졌다.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승리적으로 돌파한 것은 북측이다.

중소분쟁기의 북의 경험을 놓고 보면 결국 자주의 길만이 거대국가의 압박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다른 한편 남측만 고착된 시각만으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를 선택하는 딜레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남북을 크게 묶은 통일국가적 전망속에서만 양국틈에 끼인 모순과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선택은 명확하다. 자주의 길, 남북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것만이 새로운 미국분열시대, 중미대결시대에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패권 약화를 한국 자주성 강화의 기회로

정 성 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1. 현재 미국헌법상 외교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에게, 집행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의회의 권한은 제1조 8항에서 보듯이 전쟁선언, 예산 승인, 군대 육성과 지원, 입법권, 조약 협상에 대한 자문과 동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준, 외국과의 무역에 대한 통제이다. CIA와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정보기관의 정보보고를 기초로 하여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장기정책과 단기대응으로 결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다른 차관급을 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집행라인은 국무부장관-부장관-차관-부차관-차관보-부차관보 등이다. 차관은 직업공무원인 외교관이 오를 수 있는 최고직이다. 차관보는 국장급이며, 동아시아태평양국장의 경우 보통 6자회담의 수석대표이다. 동아시아태평양국장 아래 한국과장이 있다. 외교안보정책을 만들어가는 실무자들은 국무부, CIA, NSC 등에서 근무하는 직업관료들, 대학 및 연구기관의 민간 전문가, 정보 관련 직업 군인들이다.

미국의 외교안보연구기관 중 단연 영향력이 큰 곳은 미국외교협회(CFR)이다. 수시로 장관급, 대사급 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싱크탱크의 경우, 록펠러 재단은 전통적인 보수집단,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는 신보수주의자의 집단,

‘미국 안보위원회(ASC)’는 군산복합체의 모임이다. 미국 민주주의 재단, 프리덤 하우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재단 등이 있다.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이민자 조직, 망명자 조직들도 정책결정과 현안에 개입한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이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 부시행정부 시절인 카렌 브룩스(Karen Brooks)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안보캠프에 결합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빅터 차 (Victor Cha)가 2007년 5월까지 아시아국장을 담당했으며 6자회담의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는데, 미 의회에서 열리는 북한문제 청문회의 단골 패널이다. 중도보수적 성향으로서 북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고위급 대화를 하지 말고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미 테리(Sue Mi Terry)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아시아국장을 역임했다. 12살까지 한국에서 자라 한국어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한국 담당 주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한국 출신 한반도 전문가로서 바이든 행정부에 등용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대니얼 러셀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1994년 미-북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했다.

국가정보국 북한담당 부조정관을 역임한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r)가 NSA 정보수집관, CIA 분석관, 美국가정보장실(DNI) 북한 담당 부국장을 거쳐 2014년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를 역임했다. 엘리슨 후커(Allison Hooker)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한반도를 담당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 업무를 담당한 앤드루 김은 2018년 퇴직해 스탠포드 대학을 거쳐 2020년 9월 하버드대 벨퍼 센터 한국 프로젝트 비상임연구원으로 갔는데, 펠페이오 장관의 4차례 방북에 동행했다.

3.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에게 북한이 전략적인 양보를 할 때까지 충분히 압박한 이후 협상에 나서도록 조언할 가능성이 높다. 즉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을 목격한 바이든 행

정부는 전략적 인내보다는 이란식의 최대압박과 개입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과 그 참모들이 북미정상회담이 불가하다고 공언할 정도가 외교적 바보가 아니다.

대북 전면 제재, 즉 원유공급의 전면적인 중단, 민간교류의 금지를 중국이 결단해야 하는데, 북의 체제 유지가 중국의 국가안보이므로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리 없다. 중국의 대북 태도 보다는 북의 미 본토 위협이 더 중요 변수로 등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외교적으로 운신할 폭이 넓어지게 된다.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외교안보전략의 성패는 바로 이 중국의 확장된 외교 선택의 폭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대처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북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다. 1990년 들어 한국이 소련과 중국과 수교하는 반면 조선은 미일과 수교는커녕 제재와 고립을 당하자 체제보장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결심했다. 게다가 중국이나 러시아는 조선에게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다. 조선은 자체 무장을 하는 내부 균형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라크, 리비아를 침공하자, 북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주력하여 2010년대 핵탄두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완료하였다. 지난 열병식에서 괴물 ICBM 등의 전략무기와 군중, 병종마다의 새로운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

**4. 트럼프가 불복하고 소송 중이다.** 바이든이 2021년 1월 취임할 경우, 내년 6월까지 한반도 담당 인선을 마무리하고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확정할 것이다. 그 이전의 3월말 한미군사연습 재개 여부가 한반도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당사자, 운전자로서 ‘핵감축 전제 대화’를 언급한 바이든을 설득하여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하면서 북미대화를 주선해야 한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주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최저임금인상률 지속 향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의 예방

등 노동존중 관련 사안의 온전한 실현은, 재벌개혁, 외자유제, 중소기업인 지원 등의 경제대개혁 없이는 한계가 있고, 경제대개혁은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 개척을 통해 원료 시장 자본 기술 등 경제의 기본 구성요소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후방기지 구축 없이는 재벌과 외자의 사보타지로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법 개악이나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평화협력-경제개혁-노동존중에 높은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주노조운동도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안의 임단협에 매몰될 게 아니라 가장 큰 밥그릇인 평화변영통일과 경제대개혁의 병행에 앞장서야 한다. 8월 계절적 통일운동, 선봉대만의 통일운동, 정세 좋을 때 남북노동자교류에 그쳐서는 안 된다. 100만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자주평화통일운동을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